

## 청년과 청년 노동시장, 다시 훑어보다

이 정 민\*

2000년대 이후 청년이 국정 의제에서 소외된 적은 없다. 참여정부의 청년실업 종합대책에서 출발하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년인턴제와 고용률 70% 목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 선언에 이르기까지 청년 고용은 어느 정부에서나 일자리 정책의 핵심 대상이었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최초로 청년이 독립 국정과제의 범주로 격상되었고, 현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청년의 당사자성을 국정과제에 명시하였다.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고용·일자리 중심에서 주거·자산·참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 지난 20여년간 청년 의제의 위상과 프레임은 꾸준히 진화해 왔다.

그러나 국정과제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청년 문제가 실제로 개선된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를 정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하여 2025년 45.0%에 그쳤고, ‘쉬었음’ 청년은 42.8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고용 바깥의 지표는 더 어둡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고, 그 규모는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이며, 청년 자살률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18.2명에서 2024년 24.4명으로 다시 올랐다. 1인 가구의 비중은 15~34세 기준 2020년 6.7%에서 2024년 25.8%로 급증하여,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혼자 살고 있다. 이 지표들은 각각 다른 영역의 것이지만, 청년이 사회와의 접점이 끊긴 채 활력을 잃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돌이켜 보면 청년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에는 공통된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한두 가지 자격요건 — 소득, 학력, 고용 상태 등 — 을 기준으로 ‘조건이 부족한’ 사람을 선별하고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이 처한 현실은 하나의 잣대로 그 열악함을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가구, 건강, 지역, 학력, 성별, 노동 경험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준만으로 선을 긋는 방식은 다른 기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놓치고 예기치 못한 차별을 만들어낸다. 보편적 청년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증상이 드러난 뒤에 처방하는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ares7823@kli.re.kr).

선별적 치료제가 아니라, 청년 집단 전체를 시야에 넣되 세부 설계를 달리하는 보편적 백신을 개발하고 그 효과적 접종 경로를 고민하는 일이다. 그리고 좋은 백신을 설계하려면 먼저 대상을 정밀하게 이해해야 한다.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실제로 어떤 이질적 집단들이 있는지, ‘청년 노동시장’은 그들 각각에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는지 — 이번 특집은 같은 이름 아래 묶여 온 청년들을 보다 세밀한 렌즈로, 특정 시점의 단면이 아니라 진입과 이탈의 경로까지 고려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호 특집에 실린 세 편의 원고는 각각 미스매치, 취약청년,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창으로 이 작업에 나선다. 「청년 미스매치 실업 실태와 개선 방안」은 청년 고용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직능수준·업종·직종별 수요-공급 불일치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전달과 부문 간 이동 지원, 중소기업·블루칼라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졸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는 고등교육 진학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고졸 비진학 취약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악순환을 환경취약(가정 해체, 경제적 곤란 등)과 개인취약(건강 문제, 학업 중단 등)의 중첩과 병목 현상 등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속 지원경로의 구축과 원스톱 지원체계, 숙련 형성 경로의 확충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고찰」은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현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졸업한 미독립 미혼자녀 집단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경제활동 상태의 고착이 진행되는 결정적 시기, 입직 초기 청년이 겪는 사회적 인프라의 악화 등을 지적하며, 생애주기 단계별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이탈 예방 요인을 촘촘히 따져 보고 적소 정책(niche policy)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년’이라는 말에는 본래 푸르름과 가능성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고, 그 단어만으로도 낙관이 허락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푸름 안에 얼마나 다른 색조와 농도가 공존하는지, 그리고 젊음에 대한 기대가 의무로 작용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각기 다른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호 특집의 논의가 함께 요청하는 것은 결국 시선의 전환이다. 출발점은 청년을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고유한 경로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으로, 청년 노동시장을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집단마다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복수의 장으로 보는 데 있다. 노동 정책이 내미는 손길이 청년 각자의 결을 읽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